



1948년 음력 10월 15일의 학살터(제주 무등이왓)

만에 500여 명을 체포하고, 4·3 발발 직전까지 1년간 2,500여 명을 구금했다.

때마침 '5·10 단독선거' 결정으로 좌파 조직만이 아니라 김구, 김규식 등 일부 우파와 중도파도 5·10 선거 반대 대열에 나서는 등 정치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드디어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500명 미만의 무장 자위대가 11개 지서와 서북 청년단, 대동 청년단 등 우익 단체 요인 집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고, 무장대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저지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추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진압 상황을 지휘하던 제9연대 경비대장 김익렬은 사태 초기를 '치안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을 제주도민들과 경찰 및 서북 청년단과 같은 극우 청년단체 간의 충돌로 여겨 '선

선무 후 토벌' 원칙을 세우고 무장대와의 평화협상 등 화평 정책을 취했다. 미 군정은 김익렬에게 초토화 작전을 촉구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미 군정은 1948년 5월 6일자로 경비대장을 강경 진압론자인 박진경으로 교체하고, 또 제주도 미군 사령관을 강경파인 브라운으로 교체하여 한 달여 만에 6,000명을 체포하는 대규모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또한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선거 실시 결과, 제주도내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갑·을구 등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고, 제주도는 남한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5·10 단독선거 거부 지역이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1948년 10월 19일에는 제주 파병을 거부하던 전남 여수의 제14연대가 이른바 '여순항쟁'을 일으키자, 새로 부임한 송요찬 연대장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이 감행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진압군이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기 이전인 1948년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4·3 발발로 빚어진 인명 피해는 1,000명 미만으로 추산되었으나, 11월 이후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면서 제주도는 '피로 물든 섬'이 되고 말았다. 초기의 군경 자료에서도 당시 제주도 내에서 봉기한 무장대는 대체로 주력부대 500명 미만, 동조 가담자 1,00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소수인 이들을 토벌해 가는 과정에서 3만 명 이상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제주도민들이 '빨갱이', 혹은 '폭도'로 매도당한 채 학살됐음을 뜻한다.

2) 전남 지역의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전남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주로 전

남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여순사건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학살당한 사람들은 여순사건에 의한 민간인 피학살자들이거나 빨치산 토벌 시기에 학살된 주민이 대부분이다.

여순사건 이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이른바 '빨치산' 혹은 '반란군'으로 불리는 좌익 무장 세력들이 여러 산중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빨치산'을 도와주거나 지지했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부대의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학살당했다. 대체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상황이 그랬다. 여순사건 외에 1949년 화순군 춘양면과 이양면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학살당했는데, 여순사건의 파장이 주로 전남 동부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남 중서부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순항쟁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에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연대 소속의 대다수인 3,000여 명의 군인들은 '민족이 민족을,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봉기를 했다. 여기에 여수의 지방 좌익 세력이 가세하고 이승만의 실정과 경찰의 학정에 반항하여 민군 봉기로 발전한 것이 여순항쟁이다. 불법적이고도 초법적인 계엄령과 국방 경비법에 근거한 이 사건의 진압 과정과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진압군은 주민들에 대한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 행위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



국군 제14연대가 주둔했던 장소(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극우 세력은 이를 김구의 한독당 세력을 압살하는 정치적 계기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들은 일반 주민들을 북과 연결된 공산주의자로 몰고 갔다. 정치적 압력에 쫓긴 현지의 무리한 강경 진압 작전과 진압 직후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학살은 이러한 의도의 결과였다.

특히 반란군의 주력 전투 병력이 이미 광양, 백운산과 벌교 등지로 도주한 뒤였지만, 군과 경찰 등의 본격적인 진압 작전은 정규 반란군만이 아닌 전 주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여 희생자를 더욱 배가시켰던 것이다.

제주 4·3 사건 토벌 작전에서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쏘아 없애는, 이른바 삼광삼진(三光三盡) 방식을 주로 사용했던 것처럼, 여수 진압에서는 주로 불을 질러 진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술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고, 체포되어 즉결 처형을 면한 사람들은 대개 형무소 복역 중 6·25가 발발하면서 처형되었다.

진압 이후에는 주로 지역 경찰과 우익 인사, 우익 청년단체, 진압군 병사들이 지목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색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양민과 폭도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은 채 의심가는 사람들을 자세한 조사도 없이 즉결 처분했다. 군경의 이 같은 학살은 그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된 계엄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역자 색출은 전 주민을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집결시켜 놓고, 주로 '머리가 짧은 자, 군용 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에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흰 고무신을 신은 자' 등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의 기준에 의해 추려졌다. 일부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에 맞아 무참하게 학살되거나 총살되었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악명이 높은 제5연대 김종원 대대장은 일본도로 즉결 참수 처분을 자행하기도 했다.

당시 여수 순천 지구에 내려진 계엄령(1948년 10월 22일)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위헌 사항이었는데, 당시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법령 없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조차도 정부의 위협과 강경 분위기 조성으로 원칙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불법 계엄령에 근거한 이 사건의 진압 과정과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주민들은 '부역자', '빨갱이'로 몰려 무차별 포격과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의 대상이 되었다.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 자료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중상 1,128명, 경상 488명에 4,325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순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여수지역 사회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피학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0,000여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총 7,0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기록한 정부의 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당한 정도의 근접한 통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수지역 사회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학살 주체별로 보면,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95%인 9,5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지방 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5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6·25 이전 전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대부분 여순항쟁과 관련이 있다. 여순항쟁과 직접 관련된 민간인 학살로는 임실에서 여순항쟁 직후 좌익 관련자로 끌려가 학살당한 사례가 있고, 한국전쟁 직전 전주 형무소에서 1,600명 중 1,300여 명의 정치범이 학살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 직전 우익 단체에 의해 전주 고리개재 구덩이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이 집행된 사례도 있다.

4) 경남 지역의 민간인 학살

6·25 이전 경남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주로 여순항쟁 및 보도연맹과 관련된 학살이 대부분이다. 여순항쟁 이후 지리산 일대의 경남 지역에서는 이른바 '빨치산' 혹은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빨치산'을 도와주거나 지지했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부대의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이 학살당했다. 1949년에서 1950

년 9월까지 국군의 토벌 과정에서 학살된 민간인과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국가 보안법 관련자와 보도연맹원들까지 경남 지역에서 학살된 희생자는 최소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으로는 산청, 함양, 거창, 거제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학살을 꼽을 수 있다.

① 거창 위천면 5·8 사건

1948년 5월 8일 공비 습격시 위천 지서를 지키지 않고 피신했다는 이유로 위천면장이 거창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② 산청군 시천·삼장·단성 지역 학살 사건

이 지역에서는 1949년 7월 18일에서 1950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 205명의 민간인이 국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1948년 여순항쟁을 일으킨 제14연대 반란군은 광양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1949년 7월 18일 새벽,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산청군 시천면 원리 덕산 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 3연대 소속 소대 병력이 작전 수행차 출동하던 중 시천면 신천리, 일명 설통바위 모퉁이에 매복해 있던 반란군에 의해 37명 전원이 몰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토벌군은 이 사건의 원인이 주민 중에 통비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이날 오후 인근 마을 주민들을 신천초등학교에 모이게 한 후, 노약자와 부녀자는 학교 주변의 죽림(대나무 숲)을 제거하게 한 뒤 청·장년 27명을 집단 학살하고 신천마을과 보안마을의 가옥에 불을 지르고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 14명을 사살했다. 이후 7월 22일에는 또다시 원리 소재 덕산 초등학교(현 덕산 중·고등학교)에 주민들을 모아 100여



거창에서 학살당한 719명의 합동묘

명의 주민들을 학교 뒷동산으로 끌고 가 집단 학살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1950년 1월까지 6개월여에 걸쳐 거리와 들녘에서 닦치는 대로 민간인을 사살하고 가옥 수백 채를 불태우는 등 엄청난 만행을 자행했다.

③ 거창 남상면 춘전리 학살

1949년 7월 24명의 마을 청년들이 빨치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다.

④ 거창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1950년 6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창고(현 국민은행 자리)에 집단 감금되어 있다가 1차로 합천 마령재에서 약 25명이, 2차로 권빈재에서 약 30명이 학살당했다.

⑤ 거제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7월 26일(5일 동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행되었다. 1, 2차는 한국전쟁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거제 지역의 야산대들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백골·호림·백호·비호 부대 등이 들어와 민간인을 학살한 사례라 하겠다. 또한 일부 우익 단체인 민보단과 CIC(육군 방첩대, 이후 특무대), HID(헌병대), G-2(해군 첩보대) 등이 직간접으로 학살에 개입했다.

이처럼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7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학살된 민간인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950년 4월 일운면 구조리 주민 13명 집단 총살 △1949년 4월~5월 10여 차례에 걸쳐 동부면 구천 계곡에서 310명 집단 총살 △1950년 4월 둔덕면 방답에서 10명 집단 총살 △1950년 4월 장승포 신사에서 20명 총살 △1950년 7월 25일 지심도에서 400명 수장 △1949년 4월, 1950년 7월~8월 하청·연초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40여 명 집단 총살 △1949년 7월 연초면 송정리 뒷산에서 20~30명 집단 총살 △1950년 7월 장목면에서 보도연맹원 15명 집단 총살 △1950년 7월 칠천도 부근에서 40명 수장. 1949년 4월~1950년 7월 25일까지 민간인 학살자 수는 총 878명이다. 1960년 국회 조사에서는 44명(유족 측 200명), 1989년 거제 경찰서 조사에서는 400명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5) 경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경북 지역에서는 주로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그리고 미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주월산과 주왕산 일대의 경북 지역에는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수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빨치산’을 도와주거나 지지했다는 명목으로, 혹은 군부대의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또한 독도 부근에서 자행

된 미군에 의한 학살로, 한국전쟁 이전에도 이미 미군에 의한 학살 사례가 있음이 밝혀졌다.

① 문경 민간인 학살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을 산북면 석달마을에서 육군 제2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 2, 3소대의 병사들이 3소대장 유진규 소위의 지휘하에 주민 86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육군은 문경 석달에 근접한 주월산(해발 813m) 정상 부근에 수 명의 공비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점촌과 용궁(예천군)에 주둔하고 있던 2개 소대가 석봉산과 단산(주월산과 인접)을 수색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고, 이 날 오전 10시경 문경군 호계면 선암리에서 합류한 후 수색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군 수색대는 정오경 주월산 바로 아래 위치한 석달마을에서 잠시 이동을 멈추고 서성였다. 부대 지휘관은 동네 사람들이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반겨주는 기색이 없자 이를 트집잡아서 ‘국군이 왔는데도 반겨주는 이가 없는 것을 보니 이 동네는 빨갱이 동네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수색대는 마을의 집들을 모두 불태우고, 주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남녀노소가릴 것 없이 모조리 마을 앞 논바닥에 몰아놓고 총탄을 난사하여 1차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이어 수색대는 산 사람은 살려줄 테니 일어서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일어난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총격을 가하여 확인 사살까지 했다. 그리고 산 넘어 석봉리 원동에서 귀가하던 청장년 7명과 학교에서 귀가하던 어린 초등학생 14명을 마을 뒷산 모퉁이에 별도로 모아놓고 역시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3차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학살된 마을 주민은 모두 86명인데, 이 중에는 5세 미만의 어린이 11명을 포함하여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32명이었고, 65



문경 석달마을에 건립된 12세 미만 학살자 추모비

세 이상 된 노인이 10명, 여자가 42명이었다.

② 독도 인근의 미군 폭격

한국전쟁 이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례가 유일하게 발굴되었다. 1948년 6월 8일 경북 울릉군 독도 연안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해 어민 150여 명이 실종되었는데, 이 때 80여 척의 어선 중 2척만 귀환했다고 한다.

③ 경북 영양군 석보면 학살 사건

1949년 10월 30일 영양군 석보면 답곡 2리에서 당시 동네 반장이면서 연초 경작자 총대로 있던 천무호의 부친이 8살에 북으로 간 삼촌과 사상적으로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인근 주민 수명과 함께 총살당했다.

④ 대구 형무소 학살 사건

1949년 겨울 원주에 사는 이재인 씨가 원주 경찰서로 붙잡혀

갔다가 대구 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제보자 이만선의 어머니가 면회를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돌아가셨다고 한다.

⑤ 경북 영덕군 지품면 학살 사건

1950년 1월 1일 주왕산 부근에서 빨치산 흔적을 추적하던 국군 1개 중대가 산 아래 송천리 주민 중 50여 명을 묶어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각별 계곡으로 끌고 가 약 15명을 총살했다.

2.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

- 범국민위 사무처

1949년 결성된 '국민보도연맹(國民輔導聯盟)'을 만든 취지는 과거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승만 정권을 반대한 이들을 모두 보도연맹원에 가입시켰고, 또 많은 지역에서 할당된 수를 다 채우지 못하자 좌익 전력이나 사상과 무관한 주민들을 대거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들은 적의 잠재적인 동조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예비검속되어 학살당했다. 또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잠재적인 적'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되어 학살당한 이들도 있었다.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학살은 이후 물고 물리는 끔찍한 보복 학살의 시작이었다. 그 예는 경기 남부 이남 한반도 전역에서 거의 빠짐없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충북 청원

충북 청원군에서는 1950년 7월 9일(혹은 7월 11일) 국군이 청

원군 북위면 옥너봉에서 괴산군 사리면, 칠성면, 불정면 등지에서 끌고 온 보도연맹원 8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밖에도 1950년 7월경 경찰이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분터골에서 청주 지역 보도연맹원 약 100여 명을 학살했고, 1950년 7월 8일 북위면 북이지서, 7월 11일 남일면 쌍수리, 신기리, 1950년 7~8월 오창면 창고에서도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충북 괴산

1950년 6월 말, 전쟁 소식으로 뒤숭숭하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에서 경찰 지서장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다. 사담리에 모인 34명의 청년은 군용 트럭에 실려가 증평읍 양조장 창고에 갇혔다. 이 곳에는 칠성면, 불정면, 그리고 타군에서 온 보도연맹원 약 400명이 일주일간 갇혀 있었다. 이들은 비가 쏟아지던 7월 6일경 군경 가족 몇 사람을 빼고는 청원군 북위면 옥너봉 골짜기로 끌려가 다른 곳에서 온 보도연맹원 400여 명과 함께 무참하게 학살되었다. 시신은 제대로 매장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 며칠 뒤 이 곳을 지나던 이들에 의해 이 처참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충북 보은

1950년 7월 5일(음력 5월 20일경) 청원군과 청주시 등지에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200~300명이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로 끌려가 학살당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차에 싣고 온 사람들을 내리게 한 후 무차별 사격을 하여 학살했다고 한다. 이후 아곡리 마을 주민들이 이들을 한데 모아 묻고 장사를 지내 주었다.

충북 영동

1950년 7월 21일(음력 6월 7일)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석쟁이재) 야산과 영동읍 부용리 어서실에서 학살이 일어났다. 영동군 영동읍, 양강면 일대 보도연맹원은 설계리 야산으로, 영동읍, 심천면, 용호면, 황간면 일대 보도연맹원은 부용리로 끌려갔다. 설계리 야산 석쟁이재 학살은 며칠 후 준비한 시신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확인해 주었으며, 그 참상은 이 곳을 원한의 돌고개로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부용리 어서실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총살한 뒤 사람을 파묻었으나 며칠 동안 구덩이가 움직이는 등 채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생매장했다고 한다.

충북 옥천

충북 옥천군 월전면에서 1950년 7월 13일 보도연맹원 500여 명이 암매장되거나 일부 수장되었다고 한다. 이튿날인 7월 14일에도 옥천군 동이면, 옥천읍 금구리 등지에서도 보도연맹원 200여 명이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1950년 7~8월에 경산의 코발트 폐광에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경산시 평산동 산42-1번지 일대 폐광산 수직갱도와 인근 골짜기에서 대구 형무소 재소자와 경산, 청도 지역의 보도연맹원 약 3,500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것이다. 당시 목격자들은 하루 열 대 정도의 트럭에 사람들이 가득 실려왔으며, 이런 상황이 열흘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구 형무소 수형인들은 포승줄에 묶여 군용 트럭에 실려온 뒤 수직갱도 입구에 세워져 총살되거나 산 채로 수장되었고, 또 예리한 흉기로 가격당하거나 기름에 태워져 학살당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지인 청도 고평지

경북 청도

1950년 7월 중순 청도 고평지와 춘밭골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된 이들과 경북 지역의 보도연맹원 600여 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끌려간 이들은 경찰서 정문 오른쪽 국민회당이라는 곳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가족들에 따르면 그 곳에 약 400명이 있었다고 한다. 사흘 후 가족들이 다시 이 곳을 찾았을 때 국민회당은 텅 비어 있었다. 이들은 청도 고평지와 춘밭골 등지에 끌려가 무차별 학살당했으며, 또 일부는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경북 군위

1950년 7월 22일(음력 6월 8일)경 이미 예비검속되어 있던 군

위군 이화면 우보리 보도연맹원들이 전원 학살되었다. 이중 대다수는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경북 대구 일대

대구 지역에서 학살이 시작된 것은 해방 후 미 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10월 1일 '식량 배급'을 요구한 평화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여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에 10월 2일 비 내리는 대구역에서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과 무장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굶주림과 경찰의 발포에 극도의 분노를 느낀 시민들이 대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경찰서까지 접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구역의 무장 경찰들이 마침내 발포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이후 두 달간 전국을 뒤흔든 이른바 '10월 인민항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구 항쟁은 미 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틀 만에 진압되었다. 그 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를 불문하고 모두 검거되었는데, 이렇게 붙잡혀온 이들이 대구에서만 약 3,700명이었다. 이중 300여 명이 사형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거 과정에서도 많은 이들이 죽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49년부터 조직된 보도연맹은 미 군정에 반대한 전력이 있던 모든 이들을 강제로 가입시켰는데, 이들이 전쟁 발발 후 모두 학살당했다. 대구 일대에서 학살이 일어난 곳은 가창, 월배, 본리동, 성서(금호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칠곡 나환자촌, 경산 코발트 광산 등이다.

경남 거창

1950년 7월 21일(음력 6월 7일)에서 7월 27일(음력 6월 13일) 사이에 지역 내 보도연맹원을 거창 경찰서에 연행한 뒤 인민군

이 거창에 들어오기 전에 1차 20명을 합천군 마령재에서, 2차 35명을 합천군 권빈재에서 재판 없이 학살했다.

경남 거제, 사천·삼천포, 고성, 남해 일대

거제 일대에서는 1949년 4월에서 1950년 7월 25일까지 끊이지 않고 학살이 발생했는데, 보도연맹원 학살을 포함하여 모두 787명이 학살당했다.

사천·삼천포 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사천시 장구섬에서, 또다른 100여 명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옥굴에서 학살한 사건, 진주 형무소에 있던 보도연맹원들을 옥굴 골짜기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 삼천포 서금동 노산 공원에서 300~4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고성에서는 1950년 7~8월 중에 국군, CIC, G-2, 해상방위대, 경찰 등이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과 하이면에서 약 150명의 보도연맹원을 학살한 사건, G-2와 CIC 등이 고성 읍내와 각 면의 보도연맹원들을 직접 모아서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 산골짜기에서 집단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해에서는 1950년 7월 중순 남해군 운천면 월곡 문항 창선마을 앞과 비뜨섬, 진섬(긴섬) 앞 등에서 보도연맹원들이 수장당했으며, 이동면 신전리 북곡골짜기에서도 보도연맹원들이 총살당했다.

경남 마산

마산 합포구 진전면 여양리(당시 함안군 여양면 여양리 둔덕마을) 산태골 학살 현장 일대에 2,000여 구의 유골이 집단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2002년 태풍 '루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간 진실이다. 하지만 마산 삼진 일대가 '보도연맹원 골짜기'로 불

릴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60년 4대 국회의 조사 발표에서도 마산 형무소 수형인과 예비검속자, 보도연맹원 1,681명이 이 곳에서 무참하게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950년 7월 15일 시민극장 앞에 집결한 마산 보도연맹원들은 7월 중순 이후 곳곳으로 보내져 학살되었다. 또 마산 형무소에 예비검속돼 있던 사람들도 모두 학살되었다. 마산 지역에서는 7월 중순 마산시 봉곡리 수원지 입구 산골, 8월 초 영월동 뒷산 요새고개, 9월 7일 창원 남산, 9월 중순 창원고개, 9월 하순 창원군 산면 산골, 10월 8일 창원군 진전면 봉곡리 안데미골 등지에서 특무대에 의한 학살이 끊이지 않았다. 또 마산 앞바다에 수장된 이들도 많았다.

경남 양산

양산 지역의 보도연맹원은 1950년 7~8월경 약 350명이 사배골짜기에서 학살되었다. 신분 보장이 된다는 말에 보도연맹원이 된 순진한 농부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모두 예비검속되어 인근 목화 창고에 구금되었다. 면회를 갔던 가족들은, 당시에 이들이 보도연맹원이라서 구금되고 학살 후에도 보도연맹원인 것이 죄가 되어 죽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양산에서는 학살 10년 만인 1960년 4·19 직후 사배골짜기를 찾은 유족들에 의해 유골이 다량 발굴되었다. 유족들은 겹겹이 쌓인 유골들을 보고 다시 한 번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합동묘를 조성했다. 하지만 1년 뒤 들어선 군사정권은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합동묘를 파헤쳐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남 진영

진영에는 1950년 8~9월 김해 주동광산과 숲골에서 특무대와

경찰이 보도연맹원 300~400여 명을 학살한 사건과 1950년 6~9월 김해 진영군 냉정고개 등지에서 특무대, G2, 경찰이 보도연맹원 335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다. 냉정고개의 유골 251기가 1960년 발굴된 바 있다. 진영 보도연맹원 학살은 해군과 육군의 특무대가 주도했다. 진영 학살의 특이점은 강성갑 목사 학살의 책임을 물어 김병희 진영 지서장이 총살된 점이다. 강성갑 목사의 죽음에 미국 선교단체와 UNKRA(국제연합 한국 통일부흥 위원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자 정부가 학살 관련자들을 구속하여 재판했으나, 김병희 지서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1960년 4·19 직후 유족회가 결성되어 251구의 유골을 수습하여 진영읍 설창리 국도변에 합동묘를 만들었으나 역시 5·16 군사정권에 의해 유골이 파헤쳐지는 부관참시를 당했다. 유족회 간부 4명은 모두 구속되어 혁명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진영 유족회 회장이던 김영욱 대표는 유족회 활동이 죄가 되어 5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 부산

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는 6월 말부터 통금이 실시되고 7월부터 9·28 수복 때까지 헌병, 경찰, 청년 방위대원과 우익 청년단 등이 전 주민의 가택을 세 차례나 수색하면서 좌익 경력자 및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부산 형무소에 수감된 뒤 수형인들과 함께 부산 앞바다, 인근 야산에서 모두 학살되었다. 인민군이 들어온 적도 없었던 부산 지역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의 수는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950년 8~9월 사이에 부산 형무소 수감자 및 보도연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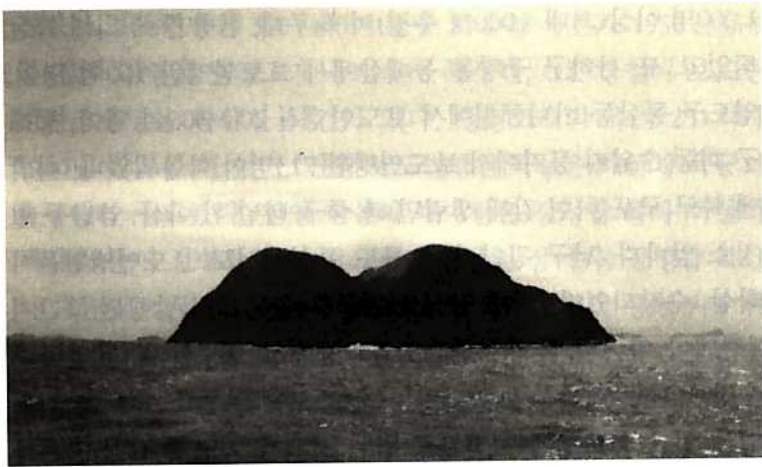
1,000명 이상(최대 4,000명 추정)이 특무대, 헌병 등에 의해 학살되었고, 또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에서 보도연맹원 160여 명이, 영도구 동삼동 미니공원에서 보도연맹원 200~300여 명이, 동래구 회동 수원지 등지에서 보도연맹원 713명이 학살되었다. 이밖에 북구 구포동(현 김해 생림면)과 중구 터널 위 야산, 암남동 혈청소 앞바다, 남구 광안리, 오륙도 등지에서도 보도연맹원들이 학살, 수장되었다. 전쟁 당시 기자들은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와 〈주간조일〉 등에서 보도한 부산 앞바다 수장에 관한 기사를 보았으나 이를 보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는 철사로 엮인 시체가 어망에 걸려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대마도 어민들의 항의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었다.

전남 영암

1950년 7월 13일(음력 5월 30일) 영암군 금정 덩재에서 경찰이 200~250명의 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이 며칠 구금돼 있던 사이 경찰이 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가족들이 찾아갔더니 이미 보도연맹원들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 당시 유족들이 학살지를 찾아 시신을 확인했는데, 한 구덩이에 5~6명씩, 40~50개의 구덩이에 시신이 묻혀 있었다.

전남 여수 애기섬

여순 사건 종료 후 정부는 전국적으로 좌익 전력자의 전향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했는데, 여수 지방의 보도연맹원들은 거의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다. 하지만 전쟁 발발 후 정부는 전국에 걸쳐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다. 여수에서는 울촌, 소라,



해남 보도연맹원을 끌고 와 학살한 진도 갈매도(일명 갈매기섬)

삼일, 쌍봉과 여수 내륙지방에서 120여 명의 보도연맹원을 여수 경찰서 무덕관에 집결시킨 후 경남 남해도 남쪽에 있는 애기섬으로 끌고 가 총살 수장했다. 또 화양면과 화정면의 보도연맹원들은 가막만 한복판의 가막섬 부근에서 수장했으며, 거문도에서는 신사 터와 소삼부도 검등여 등에서 총살 수장했다.

전남 해남(진도 갈매기섬)

1950년 7월 14일(음력 5월 29일) 밤 산이지서 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한 후 이들을 진도 인근의 무인도인 갈매도(일명 갈매기섬)에 끌고 가 학살했다. 해남에서 이렇게 끌려가 죽은 이들이 모두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족들이 이후 몰래 갈매기섬을 찾아 일부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 갈매기섬 학살은 2002년 진도 문화원의 조사와 월간 <말>의 특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해남 신문>의 심충취재로 피학살자의 신분이 해남 보도연맹원임이 밝혀졌다.

제주 백조일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 김병원은 그 즉시 제주도 4개 경찰서에 '치안통점'이라는 요시찰 단속령을 내렸다. 이를 기화로 제주도 4개 경찰서에 820명(1950년 8월 4일 현재 경찰 문건에 나타난 예비검속자 집계. 그후 계속 수감되었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미상)의 무고한 민간인이 예비검속되었고, 사태가 급박해지자 경찰사찰계(정보과)는 검속된 이들의 사상을 4등급(A, B, C, D; A급은 사상이 양호한 자, D급은 극히 위험한 자)로 분류한 뒤, 그중 C, D 급을 군에 인계했다. 이리하여 제주에서만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양민이 몰래 처형되어 암매장 또는 수장되었다. 낙동강 전선이 풍전등화 같음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제주 천도의 망상을 갖고 '사상 청소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백조일손 민간인 학살터



그중 1950년 8월 18일 이승만 정부가 부산으로 피신한 뒤 모슬포 경찰서 관내인 대정읍 상모리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돼 있던 347명 중 252명이 군에 인계되어,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아침 2시~5시에 모슬포 주둔군 해병대 제3대대 대대장 김윤근 소령의 지휘하에 송악산 첫알오름, 일본군이 파놓은 탄약고터에서 학살된 사건이 백조일손(百祖一孫) 사건이다.

3. 형무소 재소자 학살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학살 역시 당시 전국의 형무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다. 부산, 대구, 마산 형무소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이 적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군경에 의해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집단 학살되었다는 것은 피해 유족과 학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였다.

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전쟁 초기에 주로 이감을 빌미로 자행되었다. 학살된 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전, 대구, 부산, 마산, 김천, 전주, 공주, 인천, 수원, 원주, 청주, 광주, 목포, 진주 형무소 등지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소자 학살은 특성상 형무소당 최소 천여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 형무소 학살

1950년 7월, 대전 형무소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 관련 정치범들로 포화 상태였다. 정원이 1,200명이었으나 그 3배가 넘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의 주검

는 3,000~4,00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간수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수형인들의 대부분은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 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등이었다. 1950년 7월 6, 7일에 분류된 수형인 중 사상범들은 8, 9, 10일, 사흘에 걸쳐 대전시 산내면 골령골로 끌려가 미군과 사회 유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원 학살당했다.

그러나 학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무소 관계자들이 사흘 동안 수형인들을 끌고 나갔다는 증언과 달리, 현장 총살 집행자 등 관련자들은 학살이 총 10일간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주민들도 열흘간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수형인 학살 직후 대전 지역의 보도연맹원과 좌익 관련 활동 전력자들을 예비검속하여 학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군경

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일~16일 막판까지 학살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전 형무소 피학살자 수는 해제된 미군 문서에서는 여순사건 관련자 1,200명, 제주 4·3 사건 관련자 300명 등 총 1,800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최소 3,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앨런 워닝턴 등 외신기자는 7,000~8,000명이 학살되는 것을 보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 형무소 학살

대구 형무소 피학살자 수는 1960년 4대 국회의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 결과 1,40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02년 민주당 전갑길 의원실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 형무소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처리된 1,172명의 행방이 묘연하며, 이들 역시 이감 도중 학살되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더하면 모두 2,574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무소 수형인들은 대부분 가창계곡이나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가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창계곡은 수몰지역이지만 1960년 국회특위 조사 과정에서 유골과 탄피를 확인한 바 있다. 또 댐 공사를 위해 굴착작업을 하던 기사가 놀라 도망칠 정도로 땅 속에 수많은 유골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칠곡군 덕곡마을 신동고개, 대구 송현동, 상인동 일대, 동산면 동화사 입구 계곡 등 여러 곳에서도 유골이 확인되었다. 정수리에 20~30cm의 대못이 박혀 있는 유골의 모습 등에서 당시의 학살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산 형무소 학살

부산 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1950년 8~9월에 특무대와 헌병에

의해 주도되었다. 당시 부산 형무소에는 주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사상범들이 수감돼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 화신아파트 뒤 동매산과 부산터널 위, 암남동 혈청소 앞바다 등지에서 최소 1,000명 이상 학살되었다.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은 1950년 8월 3일 헌병대로 이첩된 72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행방이 묘연한 점, 1950년 9월 25일경 수형인 1,450명이 대구 형무소로 이감된 것으로 돼 있으나 대구 형무소에서는 이들의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또 당시 부산 형무소 간수였던 이의 증언에 따르면,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매일 100~200명씩 1주일 동안 암남동 혈청소 앞바다로 끌고 나갔다고 한다.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 등 부산 지역의 학살은 인민군 미점령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산 형무소 학살은 마산 등 다른 형무소에서 이감돼 온 이들까지 이곳에서 학살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학살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재소인원 일표 등의 자료를 보면, 1950년 1월에서 7월 중순 사이에 2,000여 명이 수감돼 있었는데 8월 들어 3,000명을 넘어서고 9월 25일경에는 5,900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1,460명이 줄어들고 11월 이후에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부산 형무소의 기록은 다른 형무소로 이감했다고 하지만 다른 형무소에서는 이들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또다른 형무소들도 이들을 수용할 만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형무소 수감자 학살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사상범들과 보도연맹원 등을 모두 예비검속한 뒤 수용 능력을 넘어서자 법이 정한 죄의 경중을 살피지 않고 '대청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천 형무소 학살

2003년 5월 김천시 구성면 돌고개에서 집단 학살된 김천 형무소 수형인들의 유골이 발굴되면서 김천 형무소 수형인 학살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김천 형무소 수형인들은 대구 형무소로 이감했다는 것이었으나 유족들의 제보와 당시 학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으로 학살지를 확인했고, 이 곳에서 유골이 대량 발굴되면서 학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곳에도 역시 제주 4·3 사건 등의 정치범들과 보도연맹원들이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이 김천 형무소로 이감된 후 그 행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어난 김천 형무소 학살에는 형무소 수형인 외에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도 포함되었다. 당시 매장에 참여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학살지로 거론되는 곳은 유골이 발굴된 구성면 돌고개뿐만 아니라 김천시 대백이재 근처 계곡, 직지사 근처 계곡, 구성면 과곡의 난로공장 계곡 등이다. 당시 김천 형무소 학살의 규모는 1,300여 명으로, 수형인 1,000여 명과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전주 형무소 학살

1950년 6월 26일부터 군경은 3년 이상 복역한 좌익사상범들을 전주 형무소에서 학살하기 시작했다. 28일 새벽까지 1차 학살이 있었고, 이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2차 학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민군이 전주에 들어오는 7월 18일에 제3차, 7월 20일 군경 후퇴시 제4차 학살까지 모두 1,400명에 이르는 수형인이 학살되었다. 이들은 전주 인근 황방산 골짜기와 건지산, 술개재 등 4곳에서 학살되었으며, 일부 학살 현장에는 미군도 있었



김천 형무소 재소자들의 학살지에서 발굴된 유골

다고 한다. 이는 당시 전주 형무소 형무관으로 재직했던 이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황방산 일대를 조사한 결과 다량의 유골이 발굴되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또 6월 28일에는 국군 제3사단 헌병대가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중이던 좌익사상범 158명을 이끌고 전주 형무소로 왔는데, 이들 역시 낮 시간에 일반 수형인들이 파놓은 고랑에 끌려가 모두 사살되었다. 그뒤 국군 제3사단 군인들이 수시로 사상범을 끌고 나갔는데, 한번 나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20여 일간 학살이 진행되는 사이, 처음에는 좌익사상범을 중심으로 학살이 이루어졌으나 인민군이 접근해 오면서 나중에는 일반 죄수와 미결수 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다.

공주 형무소 학살

공주 형무소 왕촌 말머리재 학살은 공주 형무소 수형인과 보도연맹원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공주 형무소는 한국전쟁 당시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큰 형무소였고, 이 곳에도 역시 상당수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었다. 2001년 한국전 당시 한 종군기자가 쓴 신문기사에서 '1950년 7월 7일 군경이 공주 금강변 말머리재에서 남녀노소 800여 명을 무차별 살육했다.'는 내용을 보고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결과, 지표면의 겨우 20~30cm 아래에서 두 개의 두개골과 탄피, 유골들이 확인되었다. 암매장지 근처의 주민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총성이 울렸으며, 한 트럭에 50~60명씩 15대의 트럭에 사람이 실려왔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과 증언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4. 미군에 의한 학살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노근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남과 북을 통틀어 전국 어디에도 미군의 폭격이나 기총소사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었던 곳은 없지만, 그중 남한 내에서 조사가 비교적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고 규모 있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 노근리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군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철교 밑에서 피난민 등 민간인 400여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이 사건은 1999년 9월 미국의 비밀 문서 두 건과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군인의 증언이 AP통신에 의해 공개되면서 전세계에 알려져 큰 충

격을 주었다. 미군이 피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겠다며 끌고 가다가 무전기로 군용기를 호출하여 폭격을 가해 죽이고 주민들을 또다시 굴다리 안에 몰아넣고는 기관총 사격을 가해 학살한 것이다.

당시 학살에 직접 가담했던 미군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은 당시 노근리 부근에서 발견되는 민간인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중위였던 퇴역 대령 로버트 앤 캐롤은 미군 제7기갑 연대 소총수들이 근처의 진지에서 민간인을 사살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이 사건은 우리가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그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한 사람도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전선을 넘어오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격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끔찍했던 당시 3일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당시 16살이던 정구식 씨는 AP통신 기자에게 "미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폭탄을 떨어뜨린 후 기총 사격을 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었다. 그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내게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의 목이었다."고 당시의 참상을 전했다.

충북 단양 곡계굴 폭격

1·4 후퇴 직후인 1951년 1월 20일 오전 10시경, 미군 비행기 4대가 400여 명의 마을 주민과 피난민이 모여 있던 충북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괴개굴) 상공에 나타나 무차별 폭격을 가한 사건이다. 미군 비행기는 굴 입구에 기름통을 던지고 폭격을 퍼부으며 기총을 난사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죽거나 질식사하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곡계굴에는 줄잡아 400여 명이 피신해 있었다. 상2리와 상1리, 오사리, 용진리 등 영춘면 사람들 가운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곡계굴에 머물렀고, 영월 등지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 단양읍으로 들어가는 보습재 길이 막혀 더 내려가지 못한 강원도 사람들도 이 굴로 들어왔다. 곡계굴은 길이 300여 미터에 높이가 2~3미터여서 피난처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안에는 연못이 있을 정도로 넓고, 굴 밖에는 피난민들이 지고 온 가재도구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1월 20일 오전 10시쯤, 미군 비행기 4대가 상2리 하늘로 들어서다가 싶더니 갑자기 곡계굴을 향해 집중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굴 입구에 쌓여 있던 이불과 가재도구에 불이 붙으면서 굴 속은 곧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다. 피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고 한꺼번에 사람이 물리면서 노인과 아이들은 넘어지고 짓밟혔다. 미군 비행기의 무차별 폭격은 무려 4시간이나 계속됐고, 용케도 연기를 피해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폭탄 파편이나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다. 400여 명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지난 1999년 충북 영동군의 노근리 학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유사한 사례로 주목받았으나 '노근리 사건 해결 이후에나 보자.'는 답변 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전북 익산역(이리역) 폭격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 이리역(현 익산역) 상공에 나타난 미군 전폭기 B29기 두 대가 무차별 폭격으로 2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수원 근처에 있던 인민군이 이리에 도착한 것은 열흘 후인 7월 20일경이다. 7월 11일 당시 기관차 사무소에서 전시 비상 상황에 대한 교양 교육을 받고 휴식

을 취하고 있던 기관사들은 비행기에 성조기가 그려진 것을 확인한 후 태극기를 흔들며 아군임을 알렸다. 하지만 미군기는 이에 아랑곳없이 이리역 기관차 사무소, 송학동 민가, 평화동 호남선 철길과 변전소(현 터미널 뒤) 사이에 약 10분 동안 수백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당시 이리 시민들은 전쟁이 터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난 가는 사람 하나 없이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폭격 당일 이리 시내는 우시장이 열려 김제, 황등, 전주, 군산 등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또 소집 영장을 받은 이들이 군 입대를 위해 이리역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날 폭격으로 이리역 구내에서만 84명이 사망했고(이리역 근무자 54명 이상 포함), 송학동 가옥 50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가옥 폭격시 사망한 사람과 변전소 부근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최소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7월 15일에도 평화동 변전소와 철길 주변과 마을이 미 공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

경남 마산

마산 지역에서는 1950년 8월경 전선이 형성되면서 다수의 마을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8월 초 신포구 신장면 부광마을에서 83명, 8월 7일 진전면 진목리에서 5명, 8월 9일 진북면 이목리에서 13명, 그리고 8월 11일에는 BBC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진전면 곡안리에서 83명 등, 불과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이 학살되었다.

진전면 곡안리 학살사건은 8월 11일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 뒷산 성주 이씨 재실에 피난해 있던 피난민들을 향해 미군이 폭격을 퍼붓고 기충을 조사한 사건이다. 전날 미군은 통역관을 대동



미군의 학살은 피난민인 줄 알면서도 무차별로 이루어졌다.

하고 나타나 피난을 권유했고, 피난민들은 날이 어두워 다음 날 아침 떠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사건 당일 아침에 진주한 인민군에 의해 미군 1명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군은 재실에 피난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복 차원의 폭격과 함포 사격, 기총소사 등 무차별 폭격으로 83명의 피난민을 학살했다.

또한 이를 전인 1950년 8월 9일에는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에서 미 제5해병 전투연대가 서북산에 있는 인민군과 대치중 피난민 대열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10여 명을 학살했다. 8월 13일에는 동네 어린이 3명에게 미군 병사 2명이 흰 독가루탄을 던져

1명이 질식사하고 2명이 혼수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밖에 8월 7일 마산시 진전면 진목리에서는 미군의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40여 가구가 전소되고,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8월 초에는 신포구 신장면 부광마을에서도 학살이 자행되었다.

경남 사천

사천시에서는 곤명면 조장리와 마곡리에서 미군 폭격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난민들이 학살의 대상이었다. 당시 피난민들은 흰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피난민으로 보여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노근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선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주로 학살의 대상이었다.

8월 2일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앞 하천 제방에는 300여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피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하천 제방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7월 29일부터 폭격이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민간인 인명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8월 2일경 정찰기가 상공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지 30분 정도 지나서 미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무차별 폭격과 기총 사격을 퍼부어 약 150명의 피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전선에서 미군은 '흰 옷 입은' 피난민에 대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는데, 이는 피난민 대열 속에 인민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미군에게 민간인은 전혀 보호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앞서 7월 31일 정오에는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앞 하천 제방에서도 폭격에 의한 학살이 일어났다. 점심을 먹고 있던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으로 13명이 학살당하고 8명이 부상했다.

경남 의령

1950년 8월 11일, 13일, 15일, 17일 화정면 상일리 보천마을, 8월 20일 의령읍 만천리, 8월 22일 용덕면 정동리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으며, 부림면 단원리, 지정면 마산리에서도 다수 주민과 피난민이 희생당했다.

보천마을은 마을 양쪽으로 암벽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강이 흘러 요새와 같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주민들은 따로 피난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고, 주변 지역의 피난처가 될 정도였다. 이곳에 8월 11일 미군 정찰기가 지나간 후 미군 전투기 4대가 나타나 마을을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찰기가 육안으로 피난민을 구분할 정도로 저공비행을 했는데도 전투기는 마을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20여 채의 가옥이 전소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다. 13일, 15일, 17일에도 폭격이 연이어 자행되었다. 특히 17일에는 소이탄을 떨어뜨리고 사격을 가하여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만천리 학살은 8월 20일 미군 정찰기가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마을 상공을 지나간 후 폭격기 4대가 나타나 마을 전체를 폭격하여 12명이 학살당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한편 8월 22일에는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서 미군 폭격기 4대가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난사하여 가옥 100여 채가 전소하고 30여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남 함안

1950년 8월 중순 함안 일대에서는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피난민과 주민 등 수백 명의 민간인이 무참하게 학살당했다. 8월 20일 범수면 토현리, 같은 날 군북면 장지리, 8월 27일 수곡리, 박곡리, 그리고 군북면 원북터널, 군북면 유현리, 가야읍 혈



네이팜탄 폭격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

곡리 등지에서 미군 폭격, 기총소사에 의한 학살이 있었으며, 네이팜탄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 8월 20일, 미군 정찰기가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에 모여 있던 2,000여 명의 피난민을 확인한 후, 기총소사와 네이팜탄을 투하하여 약 170여 명을 죽이고 1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난민들은 흰 수건을 흔들며 피난민임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미군 폭격기는 두 시간 동안이나 무차별 폭격을 자행했다. 그리고 8월 중 함안군 군북면 원북터널에는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피난중이었는데, 이곳에 일부 인민군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기관총 사격 등으로 터널 출구를 봉쇄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있었다.

경남 진주

진주 지역 역시 1950년 7~8월에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현재 알려진 사건만 해도 1950년 8월 3일

진주 주약동 약골과 진치령 터널의 폭격, 또 1950년 8월 6일 수곡면 원당리 주민 학살, 1950년 7~8월 명석면 오미리 시목마을, 반성면 새골, 정자리, 부흥나무의 학살 사건 등이 있다.

전쟁이 발발하고 진주 지역이 인민군에 점령되자 진주시 강남동, 망경동, 주약동 주민들은 약골의 진치령 터널로 대피하여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다. 8월 3일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난민에 대해 미군 전투기가 기총 사격을 가하여 40~50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사건 발생 전날인 1950년 8월 2일 밤 미군 정찰기가 조명탄을 밝히고 인근을 정찰했다는 증언을 보면 미군은 이 곳에 피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1950년 8월 6일 경에는 수곡면 원당리에서 마을 한가운데에 있던 집을 폭격하여 일가 4명을 포함한 7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또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의 전형으로, 당시 미군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집은 무조건 폭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경남 창녕

8월 초 마을 근처에 주둔해 있던 미군의 총격으로 마을 주민과 인근의 피난민 100여 명이 희생됐다는 주장이 관심을 끈다. 당시 창녕 지역에 주둔하던 미 24사단은 낙동강변 전투에서 북한군에 밀리면서 진창리와 광산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을 강변에서 20여 리 떨어진 창녕읍 지역으로 피난시켰다. 읍내의 초막골은 당시 3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몰려든 수백 명의 피난민으로 크게 붐볐다.

주민 황남연(68)씨는 “음력 7월 12일 오후, 인민군 6명이 뒷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미군을 향해 3발의 총격을 가한 뒤 사라지

자 이에 놀란 미군이 마을을 향해 수시간 동안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며 “이때 불바다가 된 마을을 허겁지겁 빠져나가 미군 부대로 대피하려던 피난민들이 계속된 미군의 총격에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부친과 아내를 잃은 배진섭 씨는 “미군이 주민들을 직접 초막골에 대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군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차별로 총을 쏜 것은 학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북 울릉 독도

미군 폭격 사건의 요체는 적을 가려내기가 어려우니 비록 피난민으로 보일지라도 ‘흰 옷을 입은 자는 모두 죽여라.’라는 인종차별적 학살이라는 점이다. 독도 폭격 사건은 비전투 지역에서 조업중이던 어부들을 폭격 연습용으로 치부한 잔인무도한 사건이다.

미군의 독도 주민 학살 사건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수백 명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해방 후부터 휴전시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진 사건은 1947년 4월경, 1948년 6월 8일, 1952년 9월 15일, 1952년 9월 22일이다. 하지만 1950년 7월 6일자로 독도가 미군의 해상 폭격 연습지로 지정된 것을 보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알려진 1948년 6월 8일 폭격으로 약 150여 명이 학살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조선일보> 등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과도정부도 미군정에 직접 항의할 정도로 큰 과장을 일으켰다. 독도 학살의 특징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사건이 발생한 점, 또 전시라 하더라도 전선과 전혀 무관한 비전투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이다.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특정한 어느 지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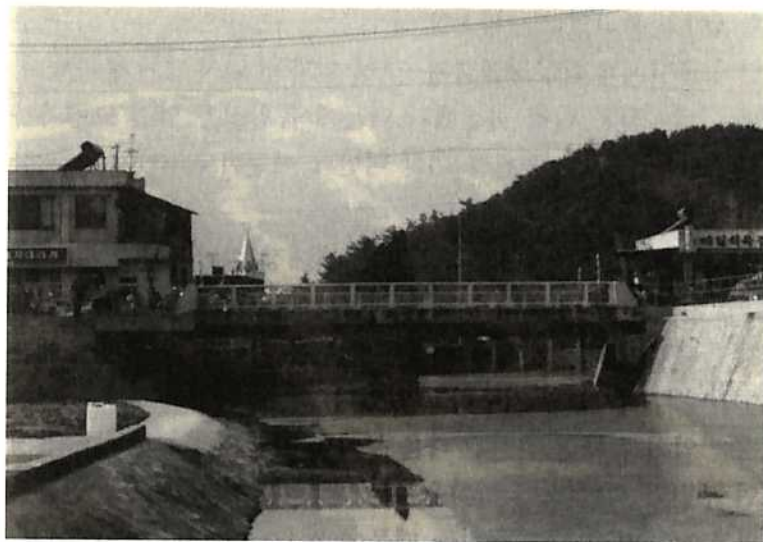
가릴 것도 없이 끌고루 전국도에 걸쳐 자행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동쪽 끝 독도에서까지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5. 한국군에 의한 작전중의 학살

—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전쟁 초반 한국군에 의해서도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남한 지역에 고립된 인민군, 빨치산과 국군 간에 산발적인 전투가 전개되던 1950년 겨울에 주로 발생했다. 1951년 2월 초순 11사단 9연대가 산청, 거창, 함양 지역에 주둔하면서 인민군의 춘계 공세 이전에 빨치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작전을 펼치게 된다. 작전 개념은 견벽청야, 즉 자신의 성은 견고하게 지키되 포기해야 할 곳은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정리하여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뜻이다. 따라서 9연대는 작전 지역 안에서 빨치산이 의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명령에 따라 1대대는 함양에서 산청으로, 2대대는 순천에서 산청으로, 3대대는 거창에서 산청으로 총공세를 펼치게 된다. 이들 부대는 본격적인 학살을 벌이기 전에 공비 출몰 지역의 가옥을 태우는 작업을 했다. 이것은 1949년 겨울 이후 대규모의 빨치산 토벌, 제주도 43 사건 이후 제주도에서의 초토화 작전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적이 세력을 부식할 수 있는 가옥과 주거지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태워 없애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이른바 삼진(三盡), 삼광(三光) 작전이었다. 결국 9연대는 산청, 함양, 거창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



나주 세지면 오봉리의 동창교 학살지

다. 피학살자의 대다수는 전투 능력이 없는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었다.

2월 8일, 군인들이 지리산 중턱의 산청군 금서면 가현 부락에 나타났다. 이들은 마을을 포위한 뒤 집집마다 돌며 사람과 가축을 몰아내고 불을 질렀다. 가족, 배 등 돈 될 만한 물건은 따로 모은 뒤 동네 사람들을 모조리 마을 앞 산제당 골짜기로 몰아댔다. 10미터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민들이 발버둥대자 군인들이 달려들어 개머리판으로 내리치면서 주민들을 순식간에 골짜기로 밀어냈다. 이어 4월 횡대로 앉으라고 명령한 다음 소총으로 장전한 군인들이 주민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부락민 12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오직 6명만이 생존했다.

가현 부락을 쑥대밭으로 만든 군인들은 이웃 방곡 부락으로 내려갔다. 이후 이웃의 방곡, 점촌, 자혜, 화계, 화산, 주상리에서

학살이 반복되었다. 2월 8일 하루 동안 529명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군인에게 학살당했으며, 그 중 남자는 50여 명에 불과했다. 젊은 남자들은 미리 피신했기 때문에 육칠십을 넘긴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도 100여 명 포함 되어 있었다.

11사단 9연대 3대대는 2월 10일 대대장 한동석의 지휘 아래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중유리, 와룡리에 출동했다. 이들은 먼저 청연 부락에 도착했다. 남자들은 대부분 피난을 가고, 마을에는 노인과 부녀자들만 거주하고 있었다. 군은 이 마을 주민 76명을 마을 앞의 논에 집결시킨 다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 날 청연 부락의 참변 소식은 이웃 여섯 개 마을에 퍼졌다. 군인들은 와룡리 주민들에게 ‘공비들 때문에 위험하니 피난 가야 한다.’며 이들을 면소재지에 위치한 신원 국민학교로 몰아갔다. 가는 도중 이들은 행렬을 끊어서 뒷줄을 탄량골 골짜기로 밀어넣고는 ‘군인 가족이 있으면 나오라.’고 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을 집단 총살했다. 이 무렵 신원 국민학교에 수용된 520명은 이웃 박산골로 몰아가 총살했다. 박산골 학살 현장에서는 오직 3명만이 생존했다. 앞의 산청에서 그러했듯이 일부 군인들은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고, 젊은 여자들은 끌고 나가 욕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민을 집단 살해한 다음에 불에 태워 흔적을 없애려 했고, 상부에는 공비를 토벌한 것으로 보고했다.

흔히 ‘거창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제로는 거창, 산청, 함양 등지에서 발생한 2·8 학살을 포함하여 주민 약 1,500명이 국군 9연대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은 이 사건에 관한 투서가 계속 날아오자, ‘공비 협력자 187명을 군법 회의에 넘겨 처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자 이승만 정권은 신성모 국방장관과



산청군 외공리의 유골 발굴 현장

조병옥 내무장관을 동시에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1951년 7월 27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열린 대구의 고등 군법회의에서 재판장 강영훈 준장은 “애국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국군 작전의 근본 정신과 투항하는 적군을 의법 처우하는 전쟁 도의를 소홀히 하여 즉결 처분하라는 명령을 부하 부대에 하달함으로써 천부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부대장도 일부 피의자를 경솔히 총살하여 명령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결을 내리고, 김종원을 징역 3년, 오익경을 무기, 한동석을 징역 10년에 처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앞에서 언급한 거창, 산청 사건 이전인 1950년 겨울 소백산맥 자락인 전남 함평, 전북 남원, 순창 등지에서도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남원에서는 공비 토벌 작전을 감행하던 11사단 9연대 소속 군인들이 대강면 강석리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 주민 90명을 대검, 일본도, 소총으로 난자한 사건도 있었다. 여기서 70명은 총살당했으며, 19명은 일본도로 목이 잘리는 참극을 당했다. 남원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이후 12월 6일 전남 함평에서는 빨치산이 활동하던 불갑산 지역인 월야면 정산리 동촌 마을을 시작으로 1951년 1월 12일까지 3개면 9마을의 500여 명의 주민이 토벌대의 습격으로 집단 학살당했다. 다른 전남 지역의 산악 인근 지역인 나주군 세지면, 나주군 다도면 암정리, 담양군 대덕면 산정리, 장성군 황룡면에서도 빨치산 토벌을 명분으로 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즉 산청, 거창에서 발생한 국군에 의한 주민 학살은 일부 군인들의 작전상의 실수라기보다는 국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종의 국가 테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학살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전시의 계엄령을 명분으로 했으나 사실상 정당한 명령 계통도 없이 비전투 민간인을 적으로 분류하고, 일정한 재판 절차 없이, 또 대부분 주민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여성과 노약자를 포함하여 주민 전체를 집단 살해했다는 점에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윤치영이 “계엄 상태에서는 당연히 처단을 받아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는 양민을 총살해도 좋은가?”라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때 법무부 장관 이인은 사실상 계엄법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즉 미 군정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제 치하의 법에 의거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설사 계엄법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 무장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가 포함된 주민을 살해한 것은 분명히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한 집단 학살이라 볼 수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확인된 이상의 사례들은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한두 명의 피해자 유족들이 끈질기게 사건의 전모를 추적한 경우여서, 이렇게 알려진 것은 전체 윤곽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단지 우연한 계기로 밝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군, 경, 우익 단체에 의한 부역 혐의자 학살

전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치안 부재 상황이다. 특히 한국 전쟁처럼 전선이 계속 이동하고, 점령 담당 세력이 바뀌는 내전의 상황에서 군과 경찰, 좌우 양 민간인 간의 보복적 충돌은 거의 피할 수 없다. 사실상 한국전쟁시 발생했던 학살 중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으나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국가’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경의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 좌우 양측에 가담한 민간인 사이의 사적인 보복이었다. 대체로 1950년 7월 이후 인민군이 남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시기에 전쟁 이전에 좌우 충돌 경험의 연장선에서 점령군의 위세에 편승한 지방의 좌익들이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경찰 가족,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그 이후 미군과 국군이 다시 그 지역에 진입하면서 인민군 치하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협력한 사람들을 한국의 경찰, 우익 청년 단체, 혹은 우익 측 피해자들이 보복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에 다시 진입한 이승만 정권은 ‘적 치하에 부역한 자를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10월 4일 부역자 처리를 위한 공식 기구인 군·검·경 합동 수사 본부가 계엄 사령관 아래

설치되어 부역자 검거와 처리를 전담했다. 《대한 경찰전사》에는 당시 부역자를 이념적 공명과 실천을 함께 하는 적극분자, '반정부 감정 포지자'로서 소극적인 공산분자, 대세에 부화뇌동하는 분자, 강압 밑에 피동적으로 부역한 소극분자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정부 감정 포지자까지 부역자로 분류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이 자의적으로 부역자로 규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적극적인 부역자는 대부분 월북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만 남아 있었다. 따라서 부역자 검거와 처리가 사실상 사적인 보복의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성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민간인과 사설 단체의 보복적 살해가 비일비재했으며, 심지어 군인과 경찰도 부역자 가족의 재산을 뺏기도 했다. 이러한 보복적 살해와 재산 탈취를 예상하여 국회 법사위는 사형(私刑) 금지법을 서둘러 제출했다. 처음에는 '군경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승만 정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12월 1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공포될 무렵에는 이미 광범위한 사적 보복이 진행된 때이며, 이 법의 제기 자체가 당시에 부역자들에 대한 사사로운 보복이 만연했음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자수한 사람과 검거된 사람을 포함하여 당국에 확인된 총 검거자 수는 55만 91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 군정 문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그레고리 핸더슨은 당시 전국적으로 재판 없이 처형된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1·4 후퇴 이후 서울 지역을 다시 점령한 인민군 측은 형무소, 경찰서, 우익 단체 등에 의해 총살, 타살된 사람이 4만 3,59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의 주도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부역자 처벌의 대표적인 예는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이다.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국군이 다시 들어오자 좌익들에게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본 태극단과 치안대의 우익 조직이 경찰과 함께 부역자 색출에 나서게 되었다. 고양 경찰서장이던 이무영은 가족이 인민군에게 죽었다는 이유로 부역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권총으로 직접 살해하기도 했고, 급기야 1950년 10월~11월에 고양시 고봉산 기슭의 금정굴에 끌고가 집단적으로 살해했다. 현재 금정굴에서는 여성의 유골 10구를 포함한 최소 153구의 유골이 발굴된 바 있는데, 가족들은 학살자가 최소 5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부역자 처벌은 인근 파주, 강화의 갑곶 나무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북 지역에서 자행

고양 금정굴 피학살자 유골 발굴 현장



된 부역자 학살은 잠시 동안의 인민군 치하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여러 우익 청년 조직이 선봉에 섰다. 강화의 경우 대한 정의단, 일민주의 청년단, 민주청년 반공 결사대, 향토단 등이 조직되었으며, 이들이 이후 수복이 되자 강화 치안대, 국군 환영 준비 위원회, 비상시국 대책회 등으로 발전했다. 이들의 활동 중에는 '적색분자의 악행과 동태 조사' 항목이 있고, 수복 후의 강화 향토방위 특공대의 활동에서 보면 '6·25 당시 부역 행위를 하다 북괴군과 후퇴하여 달아난 가족들의 동태를 살핀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들은 치안 부재의 상황에서 사실상 국가 권력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부역자 처벌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조사된 바로는 나주군 봉황면, 장흥군 장평면, 담양읍 등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에서는 후퇴하던 군경이 적에게 부역할 위험성이 있는 주민들을 서둘러 학살한 사례도 있다. 1950년 7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르는 동안 일명 '나주 부대'로 불리던 경찰 부대가 인민군 복장을 하고 동네에 들어와 환영하던 주민들을 사살한 일이 있었다. 해남, 완도 등지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의 이웃 주민들 간의 보복 살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일제 시기부터 소작쟁의가 많았던 전남 지역이다. 전북 지역도 그러했지만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번갈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군인들이 물러간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보복 학살이 많이 발생했다. 이 보복 학살은 단순히 좌·우익 이념의 구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지주와 소작인,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 씨족적인 대립과 갈등이 증첩되어 진행되었다.

한편 9·28 수복 이후 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상하자 북

한 지역에서도 사적인 보복이 만연하게 되었다. 일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자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원주민으로 조직된 임시 치안대가 멋대로 보복을 하는 등 행패가 심했다는 것이다. 이승만도 이러한 보복 살해가 남한 정권의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자, 이를 제지하고 애매한 사람까지 빨갱이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역자들에 대한 마구잡이 처벌과 학살은 사실상 군과 경찰, 방첩대 등 국가 기관 종사자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부역자는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정치적 분위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7. 인민군 및 좌익에 의한 학살

인민군에 의한 학살은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으나 주로 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던 경찰 가족, 우익 인사 가족을 집단 학살한 사례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

우선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한 상황에서 좌익들에 의해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경찰 가족, 우익들에 대한 살해가 일어났다. 이러한 폭력과 살해는 1948년 이후 보도연맹 가입 등으로 좌익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경찰과 우익 단체에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심에서 자행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북한 정규군인 인민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지의 좌익(바닥 빨갱이,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한을 점령한 북한 측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9월 20일 전 점령 지역의 행정 기구에 수감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전달했다. 수감자들을 북으로 후송하거나 후송이 곤란할 경우 현지에서 처치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 내무성에서는 내무서원들에게 우익

인사들에 대하여 '인권 존중과 구타, 신문 등의 비인간적인 악행을 금지할 것'을 교육했다. 이처럼 숙정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은 정해졌으나 양형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정은 하위 조직인 면, 동, 리 인민 위원회 등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사실상 학살의 양상을 띠었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인민군이 북으로 패퇴하는 과정에서 피수감자나 우익 인사들을 처형했는데, 대전, 서울, 개성 등지에서 광범위한 집단 처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공산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전이었다. 대전 형무소에는 1,724명의 우익 인사와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후퇴할 때 이들은 모두 학살당했다. 미8군 전쟁 범죄 과장을 맡았던 헨리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약 5,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미군과 한국인이 후퇴하는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전주 형무소에서는 수백 명의 반공 인사가 학살되었고, 전남에서도 300명이 때죽음당했다. 무안

전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학살된 사람들



에서는 80명의 주민이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불에 타 죽기도 했다. 목포시의 경우 연동의 미곡 창고에서 300명의 우익 인사가 살해되었으며, 목포시 석현동에서는 50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인민군이 퇴각하기 3일 전에 목포 전역에서 테러가 자행되었다.

전남 임자도의 경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한다. 한편 경남 사천에서도 280여 명의 관리, 경찰, 지주들이 형무소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으며, 공주, 함양 등지에서도 부녀자와 아동이 포함된 수백 명이 집단으로 살해된 후 매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도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학살을 저질렀다. 유엔 측에 의하면 이들이 서울을 다시 탈환했을 때 많게는 5만, 적게는 1만 5,000명의 민간인이 북한 측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조병옥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서울에 진입했을 때 종로서 지하실에만도 학살된 시체가 100여 구나 되었다고 한다. 한편 북한 측은 포로를 호송해 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포로들도 수없이 죽였다고 한다.

8. 북한 지역의 학살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할 때 인민군이 북으로 후퇴하면서 북한 지역에서도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 전선이 북한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남한과 유사하게 북한 지역에서도 '예비 검속'이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성분 조사는 정치 보위부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미군이 압박해 들어오자 이들을 학살했다. 진주 후 확인된 사실이지만 북한 측은 사람들을 새끼줄로 묶어서 총살한 다음 시체

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평양에서는 감옥의 우물에 넣어 학살했으며, 근방의 방공호에서도 학살을 했다. 칠골리에서 2,500명 정도, 승호리 근방의 사도리 뒷산에서 400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기림 공동 묘지터, 용산 공동 묘지에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함흥에서는 함흥 감옥에서 700명, 충령탑 지하실에서 200명, 정치 보위부 3개 처의 지하실에서 300명, 덕산 니켈 광산에서 6,000명, 반룡산 방공굴에서 수천여 명이 학살당했으며, 함흥에서만 1만 2,000여 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미군의 북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에 대해서는 이미 전쟁 당시부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영국의 《데일리 워커(Daily Worker)》의 워닝턴(Winnington) 기사는 미군이 최초로 원산 폭격을 감행한 첫날 밤에 1,249명이 사망했으며, 두 번의 폭격으로 시 전체가 초토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측은 1951년 7월 11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1만 대 이상의 미군 비행기가 250회 이상 출격하여 4,0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하여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황해도 신천에서 3만 5,380명 등 점령지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69개 지역 이상에서 804회 이상의 세균 폭탄을 투하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확인된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미군이 황해도 신천에서 직접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우익들이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살을 미국 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북측의 주장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의 작전권과 한국 정부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미군의 묵인 및 직접적인 작전 수행이 남북의 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9. 종합 정리

한국전쟁기의 학살의 모든 과정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려는 진통, 국가 수립을 향한 일종의 정치 혁명, 그리고 그것의 연장으로서 내전과 한반도에 이해 관계가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국제전의 부산물이다. 그런데 이 내전은 이미 1950년 6월 25일 이전인 남북의 분단 국가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1946년부터 시작된 정치 변혁 및 정치 폭력의 가장 극적이고 치열한 형태이고, 한국전쟁 시기 학살은 1946년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인들 내부의 좌우 대립과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6·25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학살은 제주도 4·3 사건 이후의 민간인 학살, 여순사건 이후의 민간인 학살 정도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이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제주도 4·3 사건, 여순사건과 같은 국지적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행된 학살은 유대인 학살, 스탈린의 학살,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의 학살처럼 국가의 조직적 계획과 의도, 관료적 집행 과정을 통해 고도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즉 권력의 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대만,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학살이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고, 미군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 보자면 베트남전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국전쟁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량 학살이 일어날 가능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시 그렇게 심각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일차적인 배경

은 전쟁이라는 물리적 상황 자체였다. 전쟁은 비전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모든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이 그렇게 많은 민간인 학살을 낳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국가 대 국가, 전투병 대 전투병만의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민간인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된 일종의 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항공기, 자동화기 등 현대 과학 기술에 기초한 대량 인명 살상 무기가 동원되었다는 데 있다.

20세기의 전쟁,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에서는 군인보다는 민간인 피해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는데, 학살의 규모는 이러한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 확대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실상 최초의 전쟁이자,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피학살자를 낳은 베트남 전쟁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의 학살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폭력 체제와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제2차 대전 후의 냉전 체제의 형성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파시즘, 국가주의와 극우 반공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극우 반공주의는 '반공'이라면 무엇이든지 용서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공산주의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파시즘적 논리였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국가 보안법인데, 1948년 여순사건을 빌미로 한 국가 보안법의 제정은 이승만 정권의 좌익 척결 작업이 일제 말의 사상범 통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식민지 지배의 기둥이었던 치안 유지법(국가 보안법), 계엄령, 예비 구금령, 사상 전향 제도(보도연맹)가 '좌익 세력'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조건 구속, 학살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보도연맹 조직이 식민

지 치하에서 관리로 복무했던 당시 관료, 법조인들이 만든 것이며, 전쟁 발발 후 그들을 체포한 법적인 근거도 일제 하의 예비 구금령이었다. 특히 계엄령은 미 군정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식민지 악법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주도 4·3 사건을 비롯한 전쟁시 학살 사건을 실질적으로 정당화한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즉 신생 대한민국의 법적, 행정적 지배 체제가 식민지 시기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고, 그것이 전쟁 발발 전후에 작동하여 민간인 학살을 뒷받침했다.

한편 남한의 이승만 정권 수립은 '극우 세력' 즉 일제 파시즘에 협력했던 구 식민지 세력의 부활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제국주의 억압 기구인 일제의 군대와 경찰이 그대로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일본 군대의 문화가 일본군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군에게 그대로 답습되었다. 군인과 경찰은 4·3 항쟁 당시나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끼리 따귀를 때리도록 강요한 이후 학살하거나 강간한 이후 학살하는 등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는 일본군이 남경 대학살 당시 사용했던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건국 후의 한국 경찰은 과거의 일본 경찰과 달리 검을 휴대하지 않았으나 군인들은 일본도를 공공연히 소지하여 4·3 사건이나 여순사건 당시부터 민간인 처형에 사용하기도 했다. 군과 경찰의 이러한 야만적 고문과 학살 방법은 1970년대 유신 체제 아래에서와 1980년 5·18 당시에 또다시 재현된 바 있다.

결국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일본의 전범에 대한 사면과 자본주의 성장 지원 전략, 남한의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유지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그리스 등에서 그러했듯이 대 소련 반공 전선 구축을 위해 구 파시즘 세력을 재등장시키게 되자, 민족주의 세

력 및 민중은 이들에게 저항했고, 이들 구 기독교 세력이 저항 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강대국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련에 대한 방어라는 명분, 냉전의 수행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과 그리스 등지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학살의 전 과정을 지휘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반공주의, 이분법적 세계관, 냉전 전략 그 자체가 이미 냉전 체제 구축 과정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전의 연장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학살은 이민족, 타인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동족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그것은 미군의 민간인 학살처럼 근대 무기를 동원한 대량 학살의 측면과 더불어 국가 이전의 사적인 폭력과 보복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시 학살은 남경 대학살과 성격상 유사하다. 또한 이 학살은 책임 정치의 기반을 갖지 않은 현대판 왕조 체제인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고, 또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이 인민군의 남한 우익에 대한 학살을 가능케 했다. 일제의 식민지 경찰과 군인이 타민족에게 가한 테러가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에게 향했고, 그것이 한국의 독특한 가족 문화, 씨족주의와 맞물려 잔인성이 증폭되었다.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학살은 주로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사적 보복의 양상을 지니는 경우도 국가의 묵인, 결국 전쟁이라는 정치적 환경, 경찰과 군의 실질적 후원 아래 이루어졌다. 즉 전체 피해 규모로 보면 공권력의 직접 개입에 의한 학살이 더 컸으나 전반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보다는 일제의 남경 학살처럼 공권력의 좌익 척결 의지와 가족과 친인

척의 피해로 인한 증오감과 보복심에 추동된 현장적 대응이 훨씬 더 압도했다. 그래서 한국전쟁기의 학살은 피해 규모면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못 미친다고 해도 폭력성과 잔인성에 있어서는 20세기 중반의 냉전 체제 형성 이후 제3세계에서 만연한 국가 폭력, 내전 혹은 국제전, 인종 갈등 등에서 발생한 어떤 학살보다도 잔인했다. 여기서 잔인성은 좌우익의 갈등의 심도, 권력의 폭압성 등과 비례한다. 이승만 정권의 극도의 위기 의식, 월남자를 비롯한 남한의 기독교 세력의 공포와 위기 의식, 남한을 점령했다가 패주하게 된 인민군의 다급함, 지방 좌익의 복수심, 피해 입은 경찰, 우익 가족의 원한 등이 맞물려 학살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방어할 수 없는 이승만 정권이 외세의 개입을 요청했고, 한국을 구해 준다는 명분을 갖고 들어온 미군은 한국인들을 주권을 가진 국민, 자신들과 대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진 인종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향한 무차별 폭격과 사격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한국전쟁 시기의 학살을 가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미군의 학살, 대한민국의 국가 기구 즉 군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학살과 남북한 각 국가의 묵인 아래 사설 군인, 사설 경찰, 민간 좌우익 단체 등이 자행한 사적인 보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즉 가해의 주체는 미군, 한국군, 북한 인민군, 남북한의 사설 군사 조직,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 혹은 개인들이다. 사실상은 국민이 가해자이고 피해자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생 양상의 측면에서 보면 미군이나 한국군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피난민이나 적의 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폭격, 기총소사, 집중 사격, 집단 처형 등으로 학살한 경우, 잠재적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 처형한 경우, 그리고 국가 권력의 목인 아래 자 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살해한 경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작전을 명분으로 한 학살, 처형을 명분으로 한 학살, 보복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규모에 있어서는 정규군이 작전을 명분으로 한 학살 이 가장 크지만, 그 잔인성에 있어서는 사설 군사 단체가 보복심 에 불타서 벌인 학살이 타의 경우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는 근대화되고 관료화된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 로 이루어진 학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한국전쟁기 의 학살이 단순하게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피해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법이나 국제 학술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학살 인가 아닌가가 논란거리가 된다.

일정한 명령 계통 없이 현장의 지휘관들이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하여 살해할 경우에는 학살의 범주에 포함시키기가 어렵 다. 그러나 분명히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 비전투, 비무장 민 간인이 포함된 무리를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었으며, 일정한 명 령이 있었을 경우 그것은 분명히 학살로 분류할 수 있다. 노근리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해 피해를 당한 60개 이상의 지역, 국 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거창, 산청 등지의 경우는 분명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당시 명 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학살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부역자 처벌을 명분으로 한 국민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 처형, 형무소 미결수 및 기결수 처형, 서울 수복 후 공권력의 비호로 저질러진 부역자 처벌 등도 학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죽은 사람, 남은 사람



죽은 사람, 남은 사람

- 이령경(릿교 대학 정치학 석사과정, 범국민위 자원봉사자)

1. 죽은 사람

시체 찾아온 사람 다 갖다 죽인다고 야단이 나고 막 그랬어. 궁께 우리 큰딸이 아버지 도로 거 갖다 물어 버리고…… 나 죽으면 어찌냐고 울고 그랬어. (한필남, 구례)

55년 전 전라남도 구례의 계천 마을에서 12살 된 큰딸이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온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며불며 아버지 다시 갖다 물어라고 한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어느 누구 하나 거들어 주는 사람 없어 여자 혼자 몸으로 야밤 몇 고개 산길을 넘어 죽은 남편의 시체를 업고 들어오는 어머니 앞에서 도로 갖다 물어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50여 년 전 이 땅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킨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국군은 이들 반란군 소탕 작전에 나섰고, 빨치산과 반란군이 발 불

이지 못하도록 지리산 일대에 있는 많은 마을들을 불태웠다. 계천 마을로 들어온 국군은 마을 국민학교에 주둔하면서 청년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잡아다 가둬놓고 조사를 하고 매질을 했다. 그 매질에 못 이겨 누군가 헛소리를 하면 그 헛소리가 진실이 되어 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가구 되지도 않는 산골 마을에서 40여 명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했다.

열여섯에 구례 계천 마을로 시집 온 한필남 할머니도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다. 어린 딸 셋과 함께 남겨진 할머니는 한 칸 남김없이 다 타버린 집터에서 천막으로 겨우 바람을 피하며 낮에는 국군의 밥을 해 주고, 밤에는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을 피해 숨죽여 살았다. 남편의 소식이 끊긴 지 3개월 후, 할머니는 소문으로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이 학살된 곳이 어디인지를 듣고 밤에 몰래 찾아가 땅을 팠다. 그 곳에서 부둥켜안고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내고는 공포에 떨었다. 그렇게 돌아온 할머니에게 큰딸은 어머니마저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났기에 아버지를 다시 갖다 물어라고 울었던 것이다.

사상이 목숨을 좌우했던 시절,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살았어. 말조심을 기가 막히게 했어. 밤으로는 빨갱이가 힘을 쓰고 땀고 낮으로는 대한민국이 힘을 쓰고 땀겨. 말을 별로 못 히. 이쪽에 말을 잘못 했다가 이쪽에 잡혀 가” 죽었던 시절,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낮에는 경찰이나 국군이 시키는 대로 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가족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도 왜냐고, 어디로 끌려갔느냐고 물어봐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군은 여순 지역 주민들을 사상에 따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좌익으로 분류한 사람들을 죽였다. 빨치산은 빨

치산대로 우익 쪽 사람들을 죽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사상이 목숨을 좌우했고 이 시절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서 반란군, 혹은 국군에게 여수 순천 지역에서만 1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이러한 학살의 불길은 지리산을 넘어 경상도 지역으로, 충청도 지역으로,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 6월 이승만 정권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좌익 세력에게 전향의 기회를 주고, 이들을 보호해 지도한다는 뜻의 국민 보도연맹원을 조직했다. 전국적으로 좌익 세력의 자수와 전향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정부는 국민 보도연맹원 가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전국에 할당제를 내렸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일정한 수를 채우기 위해 사상과 무관한 사람까지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면 다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조직된 국민 보도연맹원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승만 정권의 판단에 의해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집단 학살을 당했다. 전쟁 기간 중 학살된 민간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 국민 보도연맹원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진도나 경산의 폐코발트 광산과 같은 곳에서 최근 유골들이 발견되었다.

1950년 9월 28일, 인민군 치하에 있었던 서울이 3개월 만에 수복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국군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되고 도처에서 반공 청년단이 만들어져 과거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전쟁 중에 많은 우익 인사들이 좌익 세력에게 학살됐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우익 단체에 의해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들이 보복 학살을



유골이 발견된 경산의 폐코발트 광산

당했다.

대표적인 곳이 강화도이다. 강화도에서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가 월북한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남아 있던 가족인 부녀자나 어린 자식들 300여 명이 처절하게 학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1·4 후퇴나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후퇴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소위 반공 청년단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많은 민간인 특히 부녀자나 노약자를 엄청나게 학살하

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2. 남은 사람—처절한 가난

먹을 게 없어 파도 팔러 가 보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배도 고프게 말이 아닌기라. 농사일이 아니면 할 것도 없는데, 도시에 태어나 농사일을 해 본 적도 없고…… 재물도 떼어서 팔러 갔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 더운데 밥도 못 먹고…… 사과밭에 일하러 가면 돈 주니까, 거기서 일하고 양식 사 먹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술뚜껑으로 찍어 죽이려고 덤비면서 '내 자식 죽인 년'이라고 죽이려 했다. (박태선, 영천)

전쟁은 살아남은 이들로부터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하루 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이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삶을 잃은 유가족들은 피붙이가 학살당한 고통만큼이나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할 뿐이었다.

국민 보도연맹원으로 남편이 학살당한 박태선 할머니는 '남편 죽인 년'이라고 홀몸으로 시댁에서도 쫓겨났다. 이렇게 쫓겨난 여성 유족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여성들은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식민지의 빈곤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던 탓에, 가게의 책임을 떠맡아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농사일이라곤 해 본 적이 없었던 박태선 할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 품을 팔거나 남의 집을 떠돌며 식모살



거창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중인 기념관과 위령비

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여성들은 남편이 학살당하고도 그대로 눌러앉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구례의 한필남 할머니는 '집안에 남자들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지. 근데 어디로 갈래도 알아야 가지.' 하며 떠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군인들이 학살을 자행하면서 마을의 집마저 다 불태워 버려 바람 피할 곳조차 없이 타 버린 집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한필남 할머니의 경우도 시집 오기 전까지는 고향 마을 외에는 외지를 나가 본 적도 없는 형편이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되어 두 딸을 데리고 어디고 갈 곳이 없어 천막으로 바람을 피하며 남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것이다.

농사 지을 땅이라도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농사 지을 땅조차 없는 극빈층인데다 부양해야 할 가족마저 많은 여성 유족은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식모살이나 매매춘과 같은 일을 찾거나 재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학살당한 여성 유족들의 궁핍한 생활은 그들의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한필남 할머니의 큰딸은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어머니가 매일 밖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 대신에 집안일을 하면서 어린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책임져 왔다. 한필남 할머니는 큰딸이 없었으면 먹고 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그나마 큰딸 덕분에 살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딸 자신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는커녕 교문 근처도 못 가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킬 때까지 어머니 옆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 그래서 유족들 가운데 시골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집안 살림을 떠맡았던 큰 딸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

그나마 딸자식이라도 있었던 여성 유족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학살당해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할머니들은 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월세를 내며 먹고 살기가 힘들어 70,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식이 없어 부양해 줄 가족이 없는 박태선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 종일 앉아 도라지를 깎는다. 할머니는 매달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30여만 원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도라지나 밤이라도 까서 하루 7,000원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남편이 학살당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경우에도 경제적 궁핍은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여주 외평리가 고향인 최씨는 12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 인민군 치하에 있었던 3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은 면 단위 인민 위원회, 세포 위원회 등 각 기관의 기관원이 되어 인민군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9·28 수복 후 각 기관에서 일했거나 국민 보도연맹원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학살당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동네 교육이나 회의에 안 가고 불도 못 켜 채 몰래 숨어서 명석을 만들고 밭일만 했지만, 제2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외평리였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었다. 당시 40살이던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그는 수확해 놓은 곡물들을 챙길 여유도 없이 어머니와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맨발로 문경까지 피난을 떠났다. 하지만 피난 간 곳에서도 살 길이 없어 한 살배기 막내 동생을 영양 실조로 잃고 고향에 돌아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집도 다 잃은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 때부터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시작한 더부살이가 편할 리 없었다. 결국 최씨는 중학교 2학년 때 학비가 없어 공부를 포기하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 야간 학교를 다니며 목회자의 길을 택했다.

학살과 전쟁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 궁핍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후 그들의 삶을 통제, 감시했다. 연좌제는 국민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당했거나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것을 가족에게 책임지운 제도로, 살아남은 유족들에게 행사된 각종 억압의 근거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족들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연좌제의 피해를 받고 살아왔다.

거창의 한 유족은 서울 중앙 정보부의 직원 채용에 합격했는데도 신원 조회에 걸려 떨어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해외 유학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나주 봉황리의 유족들은 집안이나 마을에서 경찰, 군, 교육 계통에 취직한 예가 없다. 학살의 피해가

켰던 시골 산간 마을의 유족들은 그 당시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었던 군이나 경찰, 교사 쪽으로는 아예 시도해 볼 엄두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태어난 고향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면서 살아왔다. 결국 연좌제는 일상생활의 감시 통제 장치이기도 했지만 유족들에게는 또다른 경제적 궁핍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3. 남은 사람—강요당한 침묵과 단절

“나만 알고 있었지, 이야기 안 했어. 여기 (위령비를) 세워 버리게 알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만 마음 아프면 되었지…… 언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서상국, 나주)

나주 철천리에서는 2월 말이면 제사 지내는 향 연기가 마을을 가득 채운다. 2001년 유족회가 결성되어 2002년 3월 마을 어귀에 피학살자를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한 마을에서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는 집이 31가구인데도 마을에서 그 연유를 묻는 이도 설명하는 이도 없이 50여 년을 지냈다. 당시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도 그 때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었다. ‘학살’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 안에서 서로가 모르는 척 덮어두어야 하는 공공연한 비밀로 가슴속에 그 한을 묻고 살아왔다.

나주의 예와 같이 피학살자 유족들은 전쟁과 학살, 그리고 살아남은 가족들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된 사상적 억압과 통제 속에 피불이를 잃고도 자식은커녕 어느 누구한테도 말

한 마디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그것이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국군이나 경찰에 의해 가족이 빨갱이로 몰리거나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유족들은 그 사정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남편이, 동생이 창고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으러 끌려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그걸 봐도 못 붙잡는다 아이가. 입도 뻥긋 못하거든. 그 때는 시아이시(CIC)라 해서 쇠썩도 들고 이래이래 흔들고 대니고…… 그 때는 나도 아차 했으면 잡혔기나 많이 맞았을 끼고…… 가족들도 모두 피해 다녔거든…… 가고도 몇 달 동안이나 가족들 잡으러 오고 그랬다.…… 마 말도 못한다.…… 으이구…… 큰집 작은집 형제끼리도 상대를 못했다 카이. 같은 걸로 몰아붙이니…… 아무 사상도 아닌데 (……) 같은 형제간이라도 난리 나고는 경찰에서 조사하러 오면 배 다른 형제라 하고 살았다.” (양기순, 양산)

형제간에 동생이 끌려가서 학살당했더라도 경찰이 조사하러 왔을 때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 다른 형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고, 그러한 상황은 전쟁이 끝나고 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 반민주적 독재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의 참화를 생생히 체험했던 민중과 진보 세력들에 의해 4월 혁명으로 10년 만에 무너졌다. 전국 각지에서 학살로 가족을 잃고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분노가 들끓어 올랐다. 피학살자 유족들은 지역별로 유족회를 만들었고, 유골 발굴과 함께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다. 그러자

제4대 국회는 '양민 학살 사건 진상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 조사에 나서,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대해 상당한 실태 파악을 했다.

"1960년도에 유족들이 거가서 해골을 파라 해서 유족들이 다 가서 봤다. 그래, 팔 적에도 형제간은 또 잡혀갈까 봐 근처에도 못 오고, 내가 사흘을 그 더운 데서 뼈를 파는데도, 시숙들이 있어도 와서 더운 데 고생한다고 위로 한 번 못 받았다. 낮에 뼈 파고 집에 와서 빨래방망이 보면 그게 뼈같이 보였다. 그 때는 마음이 지 마음이 아니었지. 그 때는 내가 눈이 뒤집어졌다. 양산 춘추원에 합장을 하고, 비석을 세우고 안 했다. 이승만이 내려가고 장면이 들어서서, 명령이 내려와 해골 파라 해서 했다. 그거 다 봤다. 그리고는 속이 좀 풀렸지." (양기순, 양산)

경남, 경북 등지의 유족회는 합동 위령제를 지냈고, 장면 내각도 동래, 울산 등 일부 지역에 합동 위령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



1960년대 마산 유족회의 회의 장면

급함으로써, 유족들은 이제 '빨갱이'라는 누명만은 벗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사 정부에게는 빈곤 탈출과 경제 성장만이 관심사였을 뿐 일본이 남긴 식민지 유산의 청산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유지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서 군의 치부를 건드리는 이 피학살자 명예회복 운동을 불법시했다.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소급법을 만들어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다시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 재판을 통해 주모자를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하여 몇몇 유족에게는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거 다시 파라 했어. 저거가 비석도 부수고, 뼈도 다 해부쳐 가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이 두 번 안 죽었나. 우리는 어디 어찌 했지도 모른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누가 그랬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 할 판이면 우리가 그 유골을 그대로 나뒀으면…… 그래 두 번 죽음 아이가. 박정희가 들어서고 그래서 나는 박정희가 원망스럽대이." (양기순, 양산)

남편이나 가족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죽은 뒤 시신 수습도 못한 채 10년을 보내다가 4·19를 맞았다. '형제간은 근처에도 안 오고', '수고했다'는 위로 한 마디 없어도, 제대로 된 무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섰다. 하지만 4·19의 열기는 간데 없고 박정희 군사 정권은 1960년대 유족회 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비석을 부수고, 뼈를 파헤쳐 순식간에 두 번째 학살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